

안보통일센터

文대통령의 ‘한반도 평화구상’ 평가 및 대응방향

2017. 7. 12



SECURITY
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THE YEUIDO INSTITUTE

1. 주요 내용

□ 5대 정책방향

① 평화 추구

-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
- 남과 북이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
- '6·15 공동선언'과 '10·4 정상선언'으로 회귀
- 북한 붕괴 不願, 흡수통일도 인위적 통일도 不추구

②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

- 북핵문제에 대한 단계적·포괄적 접근
-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
- 북한의 안보·경제적 우려 해소
-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
- 북한의 핵 도발 전면 중단 및 비핵화를 위한 양자·다자대화

③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: 평화의 제도화

- 남북관계의 법제화
- 종전
-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

④ '한반도 新경제지도' 구상

- 북핵문제 진전과 적절한 환경 조성時 新경제지도 시행
- 남북 경제벨트 연결 및 남북경제공동체 달성

- 남북 철도연결, 남·북·러 가스관 연결
- 남과 북 '10·4 정상선언' 실천

⑤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

- 정치·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
-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
- 수해, 감염병, 병충해, 산불 등 재해·재난 남북 공동 대응, 협력
-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폭넓게 지원, 지역간 교류 적극 지원
- 북한 인권 개선 요구 및 對北 인도적 협력 확대

□ 4대 제안

① 10.4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

- 10·4 선언 10주년 및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
- 성묘 방문 포함
-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희망

② 평창 동계올림픽(2018.2) 북한선수단 참가

③ 휴전협정 64주년 7.27 계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지

④ 남북간 접촉과 대화 재개

-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 긴장과 대치국면 전환 계기 된다면
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

2. 평 가

□ ‘평화’에 방점, 그러나 안보위기로 인한 현실적 실천 문제 내연

- 북한의 핵·미사일 안보 도발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긍정 평가하지만,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이 明若觀火
- ‘평화구상’의 전반적 맥락이 ‘평화’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文대통령의 북한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대북인식이 ‘현실적’ 이기보다는 ‘낭만적’으로 평가됨
 - ※ 北의 ICBM급 ‘화성-14’ 발사(7.4)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가 예정된 상황
- 더구나,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국면,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로 인한 미·중 갈등,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추가 기운 상황에서 ‘평화구상’은 공허해 보임
- ‘평화구상’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(6.30)의 남북관계 ‘주도권’에 대한 ‘과신’의 연장선으로 보여 우려
 - ※ 남북관계 ‘주도권’은 관계개선의 주도권이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, 대북제재의 주도권 행사라는 부담 또한 동시에 있음을 인식

□ ‘6·15 공동선언’과 ‘10·4 정상선언’으로의 회귀 내용 불명확

- 각 선언의 어느 부분으로 복귀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하고, 만약 두 선언의 내용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
- 다만,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‘행위’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, 두 선언의 회귀 주장 이면에는 文대통령의

남북정상회담 개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읽힘

□ 희망적 사유(wishful thinking)에 따른 구상

- 정책방향 ③항구적 평화체제와 ④‘한반도 신경제지도’ 구상은 북한 비핵화와 연동돼 있어, ‘희망사항’일 뿐 ‘현실화’되기까지 숏한 난제가 놓여 있음
- 북한은 핵·미사일 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(通美)하며,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상황
- 4대 제안 중 ④남북대화 재개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그 바탕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급함이 강하게 묻어 있음

□ 4대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난망

- 이산가족문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 부재 아쉬움
- 북한은 남북관계를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 현 상황에서 ‘큰 대가’가 제공되지 않는 文대통령의 ‘평화구상’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※ 北 장웅 IOC 위원은 “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”
- ‘평화구상’에 북한 핵·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

3. 대응방향

□ 文대통령의 ‘낭만적’ 안보인식의 문제점 지적

-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조급증과 과욕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미흡
 - ※ 文대통령이 국무회의(7.11)에서 “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”이라며 국제정치현실을 뒤늦게나마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바람직
- 국제정치에서 ‘주도권’ 확보를 위해서는 압도적 무력 또는 비용 부담의 책임이 따른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 필요
- 오히려 지정학적으로 ‘상대적 약소국’인 우리에게 ‘주도권’ 외교보다 강대국 편승외교가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음
- 현재 지속·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 문제

□ 6·15, 10·4 선언에 대한 세밀한 점검 및 대책 수립

- ‘6·15선언’의 연방제·연합제 등 통일방식을 둘러싼 문제
- ‘10·4선언’의 대규모 對北 경협지원, NLL 문제, 남북연합제 대비 기구 운영 내포 등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

□ ‘평화체제’ 구축 쟁점화 대비 필요

-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진보·좌파진영의 오랜 숙원 과제이므로 文정권

임기內에 줄기차게 시도할 가능성 다분

- 黨은 평화체제 구축을 贊·反으로 접근하여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,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‘비핵평화체제’로 명명하여 그 내용과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충실히 준비해둘 필요
- ※ 북핵·미사일 개발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文정권 임기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□ 이산가족문제와 對北 인도적 협력의 전향적 입장 선제적 제안

- 이산가족과 특수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이산가족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므로, 이를 남북관계 차원(특수성)이 아니라 ‘인도주의’로 접근(보편성)하는 발상과 방법의 대전환을 통해 5년內 완전 해결 제안
- 이산가족 수시상봉, 서신교환, 자유왕래, 고향방문 및 정착을 추진 하며, 특히 1세대 고령이산가족 중 희망자에 한해 고향 정착 적극 지원
- 아울러, 북한에 돌발적이고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時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‘긴급구호’ 지원의 조건없는 실행

□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時 백두산 경유 제안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, 한반도內 성화 봉송時 ▲백두산 출발 ▲한라산 출발 등 두갈래로 나누어 한반도 전역을 순회하여 평창에서 합치는 봉송계획 제안 검토

◆ 中華主義 중국의 백두산 영유권 주장 실태

- √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 단독으로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화
- √ 백두산 서쪽 ‘왕텐어 국제스키장’ 건설과 송장강 백두산 공항 건설

추진 등을 통하여 백두산을 세계지도에 칭바이산(長白山)으로 명기, 중화주의 명산으로 둔갑시키려 함

- √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時 백두산 天池 성화 채화에 이은 백두산 소재의 개막공연 등은 ‘백두산 홍보’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‘동북공정의 결정판’
- √ 백두산지역 개발과 함께 백두산동계올림픽 추진 노골화

□ 추가 검토과제

- 북핵·미사일에 대응, 대선 당시 발표한 ‘안보독트린’ 활용 검토
- 文대통령의 ‘동결(1단계)-비핵화(2단계)’에 대한 당 차원의 준비